



1.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

세상을 보는 올바른 관점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경쟁사상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한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에 가장 바람직하게 기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같은 사실을 각각 다른 위치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바람직하게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만이 사회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달리 보게 마련이다. 같은 사실을 경영자는 ‘자본’의 관점으로, 노동자는 ‘노동’의 관점으로, 정치인은 ‘권력’의 관점으로 본다. 누구의 관점이 가장 옳은 것일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유독 한국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점차 반영되

* 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명사 초청특강 -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알기”(2008년 10월 29일-12월 3일)의 6번째 주제인 ‘일하고 쉼 권리’ 강연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합법화나 제 3자 개입 금지 규정의 폐지나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했던 박정희 정부의 ‘한강의 기적’에 대해 “노동자의 저임금을 경쟁력의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은 우리나라 경제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언은 20여년이 지난 뒤에 ‘IMF 외환위기’로 가시화됐다.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현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

소년 소녀 가장이 명문대에 합격했다거나, 어느 청각장애인이 20년 동안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감동적이지만, 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그러한 개인의 성실한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공담을 읽으면서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당신의 게으름과 무능과 불성실 때문”이라는 질타를 듣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공담들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면 사회의 모순된 억압 구조가 개인의 불성실로 은폐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아가는 현상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불행해지는 현상을 깨닫기 어려워진다.

장애인이거나 노동자들처럼 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사회를 조금씩 평등한 구조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평등한 구조로 바꾸는 일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역경에 처한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충고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이다.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하라”는 충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익숙하게 훈련받아온 미덕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통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거나 “어둠을 뚫고 솟아나 세상의 빛이 되시오”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 많은 것들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계속 보장될 뿐이다.

역사와 사회를 보는 올바른 관점은 반드시 지식과 교양과 인격의 수준과 비례

하지 않는다. 개인의 덕성이나 교양과 지식의 수준과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인 다수의 선택이 옳은 이유는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 중의 하나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키가 너무 큰 나무는 키 작은 나무에게 햇볕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키 작은 나무가 햇볕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키를 키우거나 키 큰 나무의 햇볕을 가리는 가지를 걷어내는 수밖에 없다. 키 작은 나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숲의 구조가 더욱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 역시 그와 유사하다.

2. 제도권 교육과 언론의 노동문제 인식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학교 교육의 역기능

시민적 권리의식을 함양하는 선진국 교육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노동조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매스컴의 정보 전달이나 간접적인 사회 경험 등을 통해 오히려 노동조합은 뭔가 대단히 불순하거나 불온한 단체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길들여져 온 측면이 있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노동법, 노동운동, 노동조합 등에 관한 제도권 교육을 도외시하여 교육을 통한 시민 권리 의식 함양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장차 노동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아무런 개념 정리도 없이 노동자가 된다. 대학에서 노동문제 강연을 들으러 온 학생들에게 그 취지를 물으면 “대학생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노동문제를 이해해야지요.”라고 답하곤 한다. 그렇게 답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자신들도 곧 노동자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는 기색은 없다.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노동문제를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자본주의 이행 과정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제도권 교육과 언론의 책임이 크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외적으로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는 중요한 준거 틀로서의 보편타당성을 갖는다.

다른 나라의 제도권 노동교육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노동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학습한다. 독일 중등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노사관계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민주주의와 공동결정의 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에서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학생들 중 극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장차 대부분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의 가족이 되는 사회에서 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에서부터 노사관계에 대해 중요한 비중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독일 중등학교 사회과목의 한 교과서에서는 모두 340쪽의 분량 중에 93쪽을 노동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에 관한 내용만 29쪽이나 되는 교과서도 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

는 생생한 사실들을 토론 주제로 다룬다.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임금협약, 금융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기본협약 등과 함께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노동문제에 대한 신문기사 등이 교과서에 수록돼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모의노사교섭’이 일상화된 수업으로 자리 잡혀 있어, 기업 경영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주어지면 학생들은 스스로 경영자 대표들을 뽑고 노동조합 대표들을 뽑아 임금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보기도 한다. 적절한 임금 인상과 그러한 노동조건들이 노동자의 삶과 기업 경영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력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양되는 것이다. 한 사회과목 교과서에서는 모의노사교섭을 모두 6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편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단체교섭을 가르치는 부분의 목차를 보면, 협상 과정에서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나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 문건이나 플라카드와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한 나라만 예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사회과목 교과서의 3분의 1 정도를 노동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프랑스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인문·실업계 공통으로 사회과 시간에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1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할애해서 가르친다.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 노동 시간, 공공 부문 노동자의 권리, 비정규직, 성평등 등 수십 가지의 주제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교섭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이나 가르쳐서 뭘 어찌겠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깨달을 기회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굳이 ‘톨레랑스’를 들이대며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처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짙은 혐오감으로 무장한 사회는 별로 없다. 유럽이라고 비켜갈 리 없는 신자유주의 광풍이 프랑스 사람들의 정서까지 시장경제 주의로 물들이는 바람에 최근에 조금 달라졌다고 하나,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대중적 정서가 역사 속에서 한 번이라도 자리 잡았던 사회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회는 마치 산 것과 죽은 것만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26살 미만의 청년들을 2년 동안 해고 가능한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최초고용 계약제’(CPE)에 대해서도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50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는 없다. 사회문제를 기업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해소하려는 중도우파 정부의 정책이 프랑스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예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19조 :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의 노동문제 인식

한국 사회의 언론 종사자 역시 노동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 속에서 배우며 성장했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을 듣는 언론조차 파업이 우리 사회에 미친 경제적 손해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뒤 “노동조합이 민심 얻기에 실패했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으로 가득 찬 특집 기사를 쓴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봄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한 중앙 일간지들의 사설과 칼럼 제목들은 아래와 같았다.

경제위기에 기름 끼얹는 민주노총 정치파업
 촛불민심 편승한 정치파업 안 된다
 명분도, 동력도 상실한 총파업 위협
 총파업이 스포츠 경기인가
 현대차 노조의 ‘자해(自害) 파업’, 민노총의 ‘야구 파업’
 노조원도 외면한 민노총 정치파업
 산업현장 외면 받는 민노총파업

민노총,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나
 노조원 뜻 거스른 정치파업 안돼
 정치파업 싫다는 현장 勞心 짓밟는 민노총
 “민노총은 총파업 만능주의”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터뷰)

이러한 언론을 통해서는 파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파업에 사회에 미치는 해로움과 견주어 긍정적 효과는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한국 사회 노사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언론이 수십 년 세월 동안 조율해온 그릇된 인식의 탓은 아닌지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안정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누르는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고 최소한의 보람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노사관계가 안정된다. 노동자들을 꾸짖는 캠페인으로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임금이 상승되는 속도보다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 요구는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고전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한다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

외국인 CEO들의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다음의 주장들을 한번 눈여겨 살펴보자.

“노사관계를 향상시켜야하는 책임은 경영진에게 75%, 노동조합과 직원에게 25% 있다.”

“파업은 신뢰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다.”

“직원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경영진의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노동조합도 파업을 무기로 내세우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 자동차업계에서는 노사 상호불신으로 그 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노사 신뢰 구축에는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이상은 노동계의 주장이 아니라, GM대우자동차의 외국인 사장이 임금협상을 체결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외국인 경영자들이 많다. 한국도요타의 오기소 이치

로 사장도 도요타의 노사문화를 설명하면서 “노조는 경영진을 비추는 거울이다. 경영진이 잘하면 노조도 잘하게 돼있다.”, “경영진의 꾸준한 노력 없이 안정적 노사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며 노사관계에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가 오기소 이치로 사장에게 “회사의 수익을 재투자자와 노동자 복지에만 활용한다면 주주의 불만은 어떻게 하느냐?”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자 그는 “우선적으로 직원의 만족을 고려하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이 성공하기 어렵다. 주주들도 직원들의 전적인 협력이 없으면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에서 유독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경영인이 한 말이다.

11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러시아로 떠나는 BAT코리아의 존 테일러 사장도 기자회견 장에서 “고약한 노조는 회사가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질라 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외국인 CEO들의 입을 빌려 들어야 하고, 그 당연한 말들이 뉴스 꺼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외국인 경영자들이 왜 이런 목소리들을 부쩍 높였을까? 외국 자본이 보기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일변도의 여론 형성은 경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활동 양상이 다소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 해도 그것은 노동자들의 인격이나 본성 탓이 아니다. “불순한 배후”가 순진한 노동자들을 조종하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와 노동문제에 대한 몰이해 현상에 큰 책임이 있다.

3. 한국 경제와 노동자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23조 :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 24조 :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휴식 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자 임금과 기업 경쟁력

수업을 듣는 경영학과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조종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발표하면서 “조종사들의 요구 사항은 ‘다른 항공사 조종사들만큼 대우해달라.’는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항의에 가까운 질문을 받았다. 다른 학생들은 “경영 재무 상태가 다른 항공사에 미치지 못함에도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요구하는 조종사들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그 질문에 대해 발표한 학생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 학생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었다.”면서 그것이 경영학을 공부하

는 학생들의 딜레마라고 했다.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동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경영’의 한계에 갇혀 ‘경제’를 보지 못하는, 지극히 경영자 편의적인 발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업 형편에 따라 노동조건을 차별 적용하는 것을 사회가 계속 용인하게 되면 기업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게 만들어 결국 국가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장경제주의 입장에서조차 그렇다. 결코 저임금 사업장이 아닌 ‘삼성’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영자가 무능한 경영자로 지탄을 받아야 국가경제가 발전한다. ‘수출’이나 ‘투자’보다 ‘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 단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인건비 절약이 중요한 경쟁력 유지 수단인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한계 기업들을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대기업 부설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것이 오히려 철저한 시장경제주의 입장이다.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은 시장경제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시적 자본주의 단계에서나 가능한 주장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영학과 학생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한다.

1929년에 시작돼 30년대에 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깨우쳐 준 교훈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케인주의에 바탕한 미국식 노·자간 타협적 시장경제주의조차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정착된 적이 없었다.

열악한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회사를 중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기업은 빨리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다른 건전한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기업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지금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반드시 살아남아서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상한 믿음이다. 노동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선진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 다음의 문제는 역시 ‘사회적 안전망’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22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 25조 :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화 <대단한 유혹>

<대단한 유혹>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캐나다 외딴 작은 섬에서 120명쯤 되는 주민이 모두 실직자가 된 뒤, 복지수표를 받으면서 근근이 살아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외딴 작은 섬에 공장을 유치해, 떳떳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공장을 유치하려면 그 마을에 반드시 의사가 거주해야만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제도적 요구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그 섬에서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한 뒤, 섬을 떠나려고 하는 의사에게 그

마을의 ‘이장’쯤 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는 8년 동안 복지수표나 바라며 줄을 서 왔어. 자네는 한번이라도 복지수표를 받기 위해 줄 서 본 적이 있나? 자네는 돈도 벌어야겠지만 부끄러움도 벌어야 돼. ‘의사가 없으면 마을도 아니다.’ 그게 진실이야. 우리가 의사 한 사람 구해보자고 이러는 게 아니네. 마을 사람 12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구.”

더 이상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욕먹을 일이겠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캐나다 작은 섬의 주민 120명이 어떻게 8년 동안이나 아무 직업도 없이,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 엄마가 아이들 셋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독감에 걸려 열이 쾅쾅 끓는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이 없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가 세 아이를 데리고 남의 동네 고층 아파트까지 찾아가는 동안 마음이 오죽했을까?

영화 <대단한 유혹>에 나오는 사회에서는, 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 채 잠들었던 할머니가 불에 타 죽지도 않았고, 돌봐줄 어른이 없는 가난한 어린 아이가 개한테 물려 죽지도 않았고, ‘긴급생계급여 대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장롱 안에서 네 살배기 아이가 굶주려 숨지고 두 살짜리 동생은 영양실조로 목숨이 위험한 상태로 발견되지도 않았고, 맛별이 부부가 직장을 구하러 나가면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갔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아이들 셋이 타 죽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당당하게 노동자가 될 때까지 기업의 금고와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8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다.

최소한 이렇게 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치열한 경쟁에 내모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하겠다는 야무진 꿈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수 세력이 강조하는 ‘국익’에도 부합한다.

한국 비정규직 고용의 심각성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수 년 전,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신규 고용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한국 경제의 저해 요소가 됐고, 향후 발전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신규 고용의 비정규직 비율이

80%로 늘었다.

“신자유주의의 원조”라는 말을 듣는 국제금융자본이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요구를 했을 리는 없다.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이 정상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사회불안이 급증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집단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 진보세력이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 자본의 경영방식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다. 재벌 산하 경제연구원조차 “양극화 현상이 경기 회복이나 경제 성장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격차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내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고용과 국가 경쟁력

기업이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을 사회가 계속 용인하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도외시한 채 노동비용을 줄이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선진기업이다.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경제주의 입장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그들의 삶이 지나치게 고통스럽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해롭기 때문에 해소돼야 한다. 기업의 단기적 이익이 언제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들은 비정규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기업 강성 노조에 돌리고 있고, 정부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가 지나치게 강성이어서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소멸하는 반면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회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노사

가 모두 동의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뜻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지 않는 한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한 꿈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발 경제 위기와 노동자 권리

1930년대에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깨우쳐준 교훈은 한마디로 “노동자 서민의 경제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같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교훈이 반영된 것이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뉴딜정책’이었다는 것은 중등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이다. 그 교훈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터져버린 미국 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 경제 불황을 ‘대공황’에 견주어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해법으로 각국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을 언론은 ‘뉴 케인스주의’ 또는 ‘뉴딜정책의 귀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의 주장에 굳이 의지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 서민의 경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은 예나 이제나 변할 수 없는 원칙이고, 한국 역시 그 교훈을 통렬하게 깨우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흑독한 외환위기 당시,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상황에서,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공익광고가 TV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다. 여성 코미디언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다가 “무조건 줄인다고 경제가 사는 것은 아니다. 똑똑하게 소비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다. 수십 년 동안 “절약이 미덕”이라고 가르친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터졌는데 “절약은 해롭다. 똑똑하게 소비하라”니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인가?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저임금 경쟁력에 바탕한 경제성장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코미디(?)였다. 수출이 줄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순간 기업과 국민이 같이 쪽박을 차는 순환고리에 갇혀 헤어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는 엄청난 카드빚을 풀어 강제로 소비를 만들어냈고 “경제위기에서 빠른 속도로 탈출했다”고 자랑했지만, 수백조 원이 건히지 않은 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로 넘어와 발목을 잡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경제 불황이 파급되고 장기간 ‘글로벌 구매력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해 말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각 나라 정

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노동자 임금을 높여 경제 위기를 벗어나자”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전도사’라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기업 이윤의 3분의 1을 노동자에게 배분하자”고 했고, 저임금 천국처럼 알려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도 “분배구조를 개선해 농촌과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높이겠다”고 했고, 일본의 후쿠다 전 총리도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과실이 급여로서 국민과 가계에 환원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미FTA에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참여정부조차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 대학교수가 “노무현 빨갱이 정권은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스웨덴 모델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을 일삼는 한국 사회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가는 ‘빨갱이’ 소리를 들을 판이다.

각국 정상들이 노동자 서민의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 이명박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를 선언하면서 부유층과 투기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집권 초기에 화끈하게 ‘전 국민 임금 동결’ 정책을 구상했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무슨 바보 같은 발상이냐?”는 식의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가 노동자 서민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거대한 흐름에 들어섰는데, 한국만 혼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가능할까?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이익을 조금 줄이면서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4. 역사 발전 과정과 한국 사회 정체성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노동조합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선진국 시민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프랑스 사람들의 그러한 정서를 ‘폴레랑스’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선진국 사회와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우리나라 노동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굳이 일제 식민지 시절까지 들추어낼 것은 뭐냐?”고 탓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 식민지라는 비틀린 근대화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근대와 중세를 가르는 가장 큰 생각의 차이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 상식인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다. 시민계급이 형성되고 시민혁명이 발생한 과정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어떤 시민적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지를 피눈물 나게 깨닫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라는 기형적 근대화 과정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한 과정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매우 달랐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계급이 출현했다. 해방된 농노와 몰락한 영주, 숙련 노동자와 소생산 자영업자들이 모두 시민계급으로 편입됐다. 시민계급은 성실성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했고 그 물적토대가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다.

우리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그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박탈됐다. 우리의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어느날 갑자기 일제 식민지라는 기형적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편입됐다.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되는 신분제도의 모순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해방이 된 뒤 ‘친일파’라고 불리던 식민지 협력자들은 사회 상층부에 진입하여 정치인·경제인이 된 반면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어떤 권력도 갖지 못했다. 근대 사회가 성립되고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의 지배 세력은 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한 집단이었다. 그 불행한 비극의 전통을 이승만정부와 군사독재정권이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

한국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각종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과 언론을 장악한 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무언가 많은 것을 감추고 있어야 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도덕 이상의 문제를 갖는다. 근대적 합리성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 노동의 희생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찬양되고 교육되었지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관점이 형성된다는 것은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에게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 또는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

는 이익 기반은 자본주의가 자리 잡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보수’는 ‘수구’와 같다.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나도 그들의 이익 기반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정권 교체’라고 아무리 큰소리를 쳐도 보수 세력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잠시 참으면 다시 자신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기대는 노무현 정부의 출현과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정치권 개혁으로 무너진 듯 보였다. 어느 정치 평론가가 설파했듯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위기의식이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사의 희극을 연출했다.

분단 상황이 미친 영향

분단 상황 역시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이용됐다. “교사가 파업을 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공무원들까지 파업을 해서 행정기관이 마비되고,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차가 멈추고, 발전노조 파업으로 전기가 끊겼을 때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걱정이 수십 년 세월 동안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했다. 분단 상황이 과장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유린당한 만큼 그 반대급부로 잇속을 챙겨온 세력이 사회를 지배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왜곡된 역사가 어느덧 한 세기를 지났다. 일제 식민지 40년, 분단 60년, 그 와중에 군사독재정권 30년 세월을 겪으며 건설된 자본주의가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틀리고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통찰해야 한다.

친일파, ‘뉴라이트’와 이명박 정부

한 시사주간지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유족들의 삶을 추적해 보도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친일파 후손들은 “대부분 사회 각계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며 평평거리고” 살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중졸 이하 학력이 55% 이상”이고 “대부분 비참하게 산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스리랑카인 이주 노동자가 돌보아주고 있었다. 스리랑카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는 그 이주 노동자가 “스리랑카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지 한국에 와서 독립운동 자

손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차마 부끄러워 더 이상 기사를 읽을 수가 없었다. 가족들과 함께 그 기사를 돌려 읽고 나서 “한국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스리랑카 운동권에게 맡기고 있는 꼴이다.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어떻게든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자.”고 결정하기도 했다.

2008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 선정 원칙을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에 두었다고 밝혔다. 어쩌다 마지못해 한두 번쯤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까지 명단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중복해서, 지속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만 엄격하게 선정했다는 뜻이다.

이 명단 발표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 문제는 공과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했고,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는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 작업은 ... (중략) ... 대한민국 선진화를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논평했다.

여당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보고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내용의 공문이 학교마다 발송됐다. 친일파의 근대화 공로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교조에 대해서는 흡사 ‘전범재판’을 하는 역사의식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것은 식민지 40년에 뒤이어 분단 60년이 지속된 특이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비정상적인 역사의식이다. 자신의 생각이 왜곡된 100년 역사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깊게 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의 기득권을 조금 더 연장시켜보려고 하는 세력과, 과거의 잘못을 고쳐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세력이 모든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5. 미래 사회 노동자·노동조합의 전망

매뉴팩처 시대의 노동자

17-18세기 매뉴팩처 시대의 수공업적 노동자는 ‘장인’이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대학교수 급이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 당시의 노동자는 숙련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일하는 모습도 지금의 노동자와는 전혀 달랐다.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일하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아내가 점심을 싸 오면 점심 먹느라고 두어 시간씩 소비하기도 했다. 대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 파

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었으니, 새삼스럽게 단체행동을 할 필요도 없었다. 식민지 경제가 상품의 수요를 전세계적으로 창출하였으나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으니 숙련 노동자들의 특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의 노동자는 도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낱품팔이 대중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특권은 기계가 생산에 투입되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 숙련된 수공업적 노동자의 특권을 분쇄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기계를 생산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의 원료로 한 장소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1종적 공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자동화, 기계화는 19세기에 이르러 거의 완성태에 도달했고, 숙련 노동자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가 아는 ‘기계 파괴 운동’은 이에 대한 특권층 숙련 노동자의 저항이었다. 당시 기계를 파괴했던 노동자는 역사 속에서 헐벗고 굶주려 온 노동자 대중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출발

그와 같은 특권층 노동자들이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 노동조합(Trade Union)이다. 노동조합을 뜻하는 영어 표현 Trade Union - 이 말 속에 ‘노동’과 관련된 의미는 없다. 달갑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은 탄생하면서부터 “특권을 상실하는 계급이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성격을 숙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칫 보수화해서 소위 ‘어용노동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래도 특권층 노동자는 존재했다

대다수 수공업적 노동자의 특권은 생산에 기계가 투입되면서 분쇄되었으나 여전히 특권층 노동자는 존재했다. 누구였겠는가? 다름 아닌 ‘기계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었다. 기계의 수요가 대량으로 요구되었으나 기계는 여전히 소수의 숙련된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막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은 태부족이었다.

이 고숙련 노동자들의 특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가 보급되거나 또는 기계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려먹는 공정이 개발되면 그들의 특권 역시 막을 내릴 것이었다. 그러나 기계 생산 공정은 19세기 산업혁명 완성 후에도 오랫동안 기계화, 자동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숙련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간섭에 대해 자신들의 숙련된 수공 기술을 무기로 능히 저항할

수 있었다.

이 숙련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데에는 격변이 수반 되었다. 기계 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계처럼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테일러 포드 시스템(Taylor-Ford System)이었다. 이 테일러 포드 시스템이 전 세계를 관철하는 데에는 50년의 세월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필요했다.

정보화 사회의 노동자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도 이러한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 지금의 고숙련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석사·박사 학위 노동자, 프로그래머, 영화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산업 종사자, 프로듀서·기자 등 언론 종사자, 벤처기업 노동자, 펀드 매니저, 연봉 1억이 넘는 골드칼라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착취당하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이러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의 대량 수요를 창출하는데, 이러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들의 특권은 점차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다. Pan Opticon System(‘전감시체제’ 또는 ‘범감시체제’로 번역하면 될 듯하다.)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노동자를 완벽하게 통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한 명당 하나의 사무실을 갖고 한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듯 보이나, 빌 게이츠는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 말단 사원의 업무까지 직접 지시 감독할 수 있었다지 않은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두뇌 노동자이든 육체 노동자이든, 글자 그대로 생산 과정 전체가 ‘유리처럼 투명한 공장’이 되는 것이다. 이 ‘유리처럼 투명한 공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은 농촌의 읍사무소에서부터 대재벌의 빌딩까지 관철하지 않는 곳이 없다.

고학력 · 고숙련 노동자의 증가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전문직종, 고학력, 비생산직 계층의 사회적 분포도는 더욱 넓어진다. 그러나 숙련된 노동자의 권력은 상승되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고숙련을 요구받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옳겠는가. 분명한 것은 이 기묘한 현상이 바로 새로운 정보화사회 노동운동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 새로운 현상에 조용하면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미래 사회의 노동자

현대 사회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 지금의 고숙련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석사·박사 학위 노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영화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산업 종사자, 프로듀서·기자 등 언론 종사자, 벤처기업 노동자, 금융산업 종사자, 펀드 매니저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착취당하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지식 기반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는 이러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의 대량 수요를 창출하는데, 이러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들의 특권은 점차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다. 선진국의 지식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이기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의사들도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온 지 10여 년이 넘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뉘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사람과 비웃는 사람으로... 우리나라 의사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금 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의 생각이 옳았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의사노조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에는 우리은행에 지점장 급 이상 직원들로만 조직된 지점장 노조도 설립돼 수백 명의 지점장들이 가입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웃기는 놈들”이라는 반응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마치 데자뷰 현상처럼 되풀이 돼 왔다. 다른 선진국에서 일찍이 발생한 현상을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설립되던 10여 년 전을 돌이켜 보자. 당시의 대통령이 “신성한 교직자가 어떻게 노동자인가? 교사가 왜 자기를 스스로 노동자라고 비하시키는가? 교사노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1천 6백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 당했다. 그러나 지금, 전교조는 9만 명의 조합원을 갖춘 조직이 됐다. 자녀들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학부모형 입장에서는 전교조를 탐탁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학부모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 4 명 중 1 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길게 보면,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잡는 3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됐다. 다양한 종류의 노동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이는 현상이 끊이지 않았다.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도

노동자라고 깨닫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이 3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진행되었다.

외국 정보통신 회사의 한국지사에는 토익(TOEIC) 점수가 거의 만점인 사람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도 있고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된 연구소 노동조합만도 우리 사회에 벌써 수십 개에 이른다. 연구기관 노동조합의 행사에 참석하면 조합원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이 대부분 ‘박사’일 때가 많다. 전문직 노동자, 두뇌 노동자, 지식 노동자, 골드 칼라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라는 말은 지식인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에는 경찰노조, 변호사노조, 판사노조가 설립돼 있고 장관이나 대사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경찰, 판사, 장관, 대사들도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라고 인식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현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장차 이렇게 변해가는 엄연한 현실을 막을 수는 없다. 프랑스의 판사들은 가치 있는 생존의 숨구멍을 트고 싶었던 것이며, 그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이 보장한 노조의 깃발 아래 단결한 것이다. ‘법복의 권위’와 ‘빛나는 지성’과 ‘판결의 엄숙성’과 같은 가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치들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언덕에 의지했다. ‘신성한 교직’이라는 교사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불법행위’라는 잣대로 교사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지점장이, 의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라는 자부심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이나 판사들이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이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역사의 순리’다. 노동자를 구분하는 ‘화이트’와 ‘블루’의 이분법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운동은 미래 사회에도 계속 실질적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6. 헌법과 노동기본권

세계인권선언 제 23조 :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다.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 24조 :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민법 이념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

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를 무너뜨리던 무렵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신념이 부당한 신분상 예속을 해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에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 계급은,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을 불평등하게 구속하는 봉건적 특권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약을 맺기만 하면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시민법’이다. 그러한 시민법 이념은 일상 경제 활동이나 거래 활동 등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 등으로 체계화되었고 ‘계약 자유의 원칙’ 등으로 대표된다.

사회법 이념

형식적으로 법 앞에 평등한 인간이 실제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평등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노동력 상품의 거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 체계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사회법’이다. 사회법 아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평등해서는 안된다. 계약자유 원칙이라는 사회법 이념에서는 것도 사회정의나 공공이익 또는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지만, 같은 근로계약 해지의 권리를 자본가에게는 보장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유롭게 언제라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같은 근로계약 해지의 권리를 노동자에게는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규제함으로써, 곧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시민법과 사회법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돈을 갚지 못하면 살을 1파운드 베어 가지겠다”는 계약은 ‘시민법’의 계약 자유 원칙 아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사회법’에서는 사회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같은 사건을 어떤 원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반대의 결론에 도

달할 수도 있다.

“나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도 일하겠다”는 계약 역시 ‘시민법’의 계약 자유 원칙 아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사회법’에서는 사회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지킬 필요가 없는 계약이 되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어떤 원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흔히 얘기되는 경영권·인사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법 개념으로 보면 경영권의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되는데 경영권 사항이라는 것이 모두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법 개념으로는 고유한 경영 사항의 폭을 제한적으로 좁혀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권의 노동법 교육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시민법 원리에 대해 익숙하게 훈련 받는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통신호 지키기 교육이 대표적인 시민법 훈련이다. 지위고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반면, 사회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법과대학에서 사회법은 선택과목이다. 사법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사법연수원에서도 선택과목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사법연수원 노동법 세미나에서 첫강의를 마치고 평가회에서 연수원생 대표가 말했다. “저희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들은 연수원생들 중에서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노동법을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동법에 무지한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양성된 법조인들이 노동문제를 올바른 사회법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자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사용해 파업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반 민사사건의 채권채무와 같이 취급하여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헌법과 노동3권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이다. 이것은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절대적 권리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의 권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제 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제 ①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그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는 것이고, 둘째, 사회 각 계급이 각각 다른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때 그 판단과 해석의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니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고, 셋째, 전체 국민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통일적 권리로서 노동 3권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별적 교섭 대신에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어 따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단결권은 무의미하고,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없는 단체교섭권이란 종이호랑이와 같다. 이러한 노동3권의 연관성을 ‘통일적 권리’라는 중요한 개념으

로 설명하기도 한다.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그 존재가 무의미하고, 단체교섭은 단체행동을 전제로 할 때에만 자본과 노동 사이에 힘의 균형을 갖추고 진행될 수 있다. 단결권은 단체교섭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단체교섭권은 단체행동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우리나라도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하나로 묶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틀을 갖춘 것도 경계가 모호한 노동 3권 모두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자는 취지이다.

노동3권을 법률로서 보장하는 또 다른 이유

권력과 자본이 노동조합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어째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류역사가 200여년의 과정을 통해 그것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집단이기 주의적인 조직이라면 그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할 리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계급적 성격은 한 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은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언론을 매일 장식하는 대형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과 자본이 이기적 이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파업의 목적이 “일 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는 목적이었다 해도 그 노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을 위해 공공의 이타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바에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이해가 무자비하게 관철되는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은 사회의 불평등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일수록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